



한·일 간 소득격차 축소와 한국의 대일 전략

/ 내부 싸움의 손실과 능숙한 대일전략의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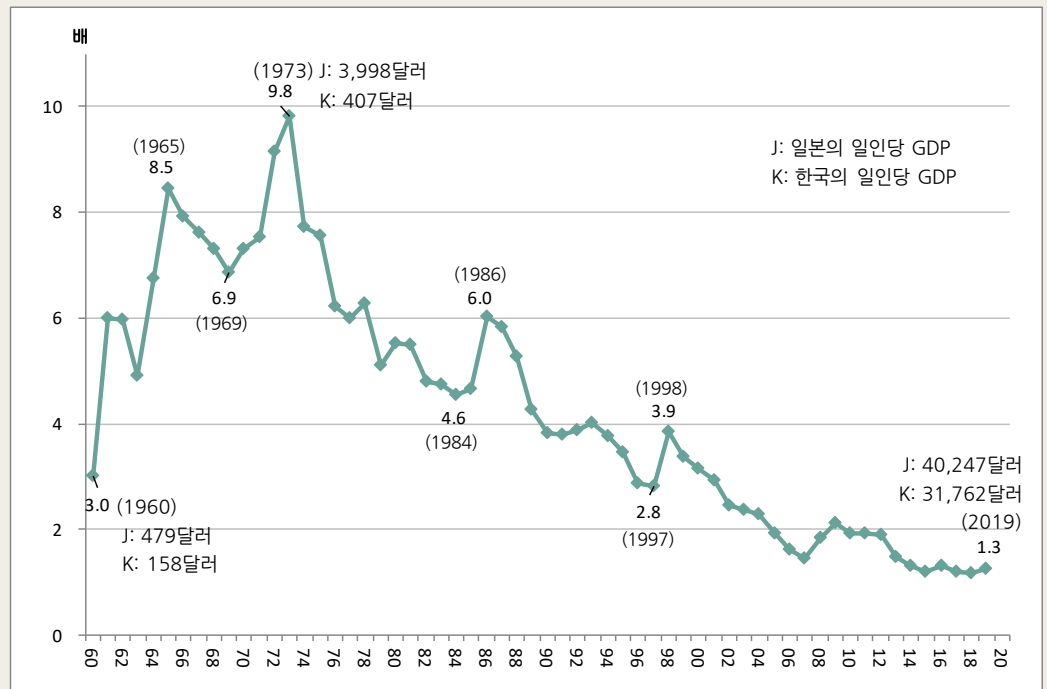
한국은 내부 분열이나 싸움으로 인한 숏한 손실을 치러왔다. 이는 내적 손실로 끝나지 않고 주변국에 이익을 주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일본과 한국의 희비(喜悲)가 교차하는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싸움도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일본은 1952년 연합국(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나 폐허 상태였다. 6·25전쟁은 한반도로서는 비극이었지만 일본한테는 폐허의 잿더미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계기로 작용했다. 막대한 인명 피해, 국토 파멸, 남북한 분단의 상처를 가져온 6·25전쟁이 일본 사회를 ‘잘 살아보자’는 쪽으로 뒤흔치게 한 모양새다.

2020년은 한국으로서는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75년, 일본으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 무조건 항복하여 패배한 지 75년이 되는 해이다. 해방 이후 역사 전개를 더듬어 보면 한·일 간 관점 차이를 둘러싼 적잖은 갈등이 등장한다. 한국의 근대화, 경제성장, 민주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양국 간 소득격차가 축소되면서 일본을 향한 한국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한·일 갈등의 원인으로 2018년 11월부터 불거진 징용공 배상 문제를 들곤 하나, 그 배경에는 한국의 소득수준이 일본에 버금갈 정도로 늘어났다고 하는 위상 변화가 자리한다.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국으로서 보다 능숙한 대일(對日)전략이 요구되는 국면이다.

/ 한·일 간 소득수준 격차 추이

일본에서는 패전 후유증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의 “더 이상 전후(戰後)가 아니다”라는 말이 1950년대 중반 회자되었고, 제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는 1973년까지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다.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1956~73) 실질 성장률은 9.1%에 이르고 있다(일본 내각부 자료). 한·일 간 소득수준 격차가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1960년부터 2019년까지 60년에 걸친 ‘일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이용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일본이 한국에 비해 얼마나 소득수준이 높은가를 보이기 위해, <그림 1>에서는 일본의 일인당 GDP(=J)를 한국의 일인당 GDP(=K)로 나눈 배율을 싣고 있다. 아울러 1960년, 1973년, 2019년의 양국 소득수준(달러 표시 일인당 GDP)도 게재하고 있다.

〈그림 1〉 일본(J)과 한국(K)의 소득수준(일인당 GDP) 배율(J/K) 추이



주: 구매력 평가로 본 2019년 일인당 GDP는, 일본 43,236달러, 한국 43,029달러로 비슷한 수준이다.

자료: The World Bank (each year), *World Development Indicators*.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1960년 일인당 GDP를 보면 일본이 479달러, 한국이 158달러로 일본이 한국보다 3.0배 높은 수준이었다. 박정희 정권에서 경제개발계획이 힘을 발휘하는 1960년 후반(1965~69년)에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높아 한·일 간 소득수준 격차가 줄어드는 시기도 나타난다. 실제로 한국은행 및 일본 내각부 『국민경제계산』자료를 이용하여 1965~69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계산해 보면, 한국(11.2%)이 일본(10.5%)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60년대 후반과 1963년을 제외한 1973년까지의 소득수준(일인당 GDP)은 일본이 한국보다 빠른 속도로 높아져 〈그림 1〉에서 보듯이 그 배율(=J/K) 값도 커지고 있다.

양국 간 소득수준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진 때는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이 끝나는 1973년이다. 1973년의 일인당 GDP를 비교하면 일본이 3,998달러, 한국이 407달러로 일본이 한국보다 9.8배나 높은 수준이었다. 1973년 이후는 양국의 소득수준 차이가 점차 좁혀져 왔다. 〈그림 1〉을 보면, 급격한 엔고가 있었던 1985년 플라자 합의,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기를 제외하면 일본과 한국의 소득격차는 추세적으로 줄어들어 왔음을 관찰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는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인공지능(AI) 산업이 커지면서 일본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산업의 상대적 가치는 축소되었고, 한·일 간 소득격차도 계속 좁혀졌다. 2019년 일인당 GDP는 일본이 40,247달러, 한국이 31,762달러로 일본이 한국보다 1.3배 높은 정도이다. 국중호(2018)『흐름의 한국, 축적의 일본』에서는 2022년 경 한국 소득수준이 일본을 따라 잡을 것이라 하고 있지만, 상품구입 척도로서의 구매력 평가 소득수준(일인당 GDP)으로 보면 이미 2019년 양국 모두 4만 3천 달러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다(일본 43,236달러, 한국은 43,029달러).

/ 동조압력과 사회 경직성

일본에서는 1947년 5월 연합국 군사령부(GHQ)의 지배하에서 현행 헌법이 시행되면서 ‘주어진’ 민주주의가 시작되었고, 개인이 주체적으로 행동하며 저항하는 민주주의가 자리잡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야마모토 시치헤이(山本七平)는 “(일본에는) 우리 모두에 대해 어떤 논의나 주장을 초월하여 구속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空氣の研究』). 국가나 조직을 위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따를 수밖에 없는 ‘동조(同調)압력’의 공기(空氣)가 지배하고, 이를 거스르면 비난의 표적이 되거나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곳이 일본이다.

국가주의는 개인에 대한 통제력이 강하고 민족주의나 국수(國粹)주의로 흐르기 쉽다. 극작가 고우카미 쇼우지(鴻上尚史)는 “일본형(型) 조직이나 사회는 옛날이나 지금도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나 사는 보람, 행복을 소비하여 존속한다’고 하는 흥포한 면이 있다”고 잘라 말한다(아사히(朝日) 신문 2020년 8월 10일자). 국가나 조직을 위한다는 명목이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폐단을 낳고 사회 경직성을 심화시켜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 거대한 관습 축적

일부 기간(1993년 8월부터 94년 4월까지 9개월간 공산당 자민당 이외의 8개 당파 연립정권, 2009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 3개월 동안의 민주당 정권기)을 제외하면 일본은 자민당 일강(一強) 체제다. 고도 경제성장이 궤도에 오르면서 1955년 창당된 자유민주당(자민당)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서 정권교체라 할 때는 대개는 자민당 총재 교체에 따른 ‘총리 교체’였지 정당이 바뀌는 정권교체는 아니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처럼 하나의 정당이 다른 정당과의 정권 교체 없이 65년 이상 이어져 온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간,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 간의 집권당 교체와 같은 양당제 정당정치가 정착되기 어려운 곳이 일본이다. ‘주어진’ 곳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일소현명(一所懸命)을 미덕으로 삼고 토론과 비판을 꺼리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자민당 독주 및 관료 지배에 기대어 온 ‘거대한 관습 축적’의 후유증이 가시화되고 일본인들의 ‘수동적 정치의식’이 굳어져 발 빠른 경제 변화 대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당 간 물갈이 및 관료사회의 변화 적응력이 강해야 사회 활력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커진다.

/ 사냥 잘 하는 매는 발톱을 숨긴다

위에서는 일본의 고도성장기 이후의 한·일 간 소득수준 격차 축소, 동조압력에 따른 사회 경직성 심화, 거대한 관습 축적으로 인한 후유증 가시화 등을 지적했다. 일본의 ‘조직 강조 및 일소현명’ 문화는 제조업 기술 축적이나 지역의 다양성으로 이어졌다. 한국이 일본과 소득 수준이 비슷해졌다고는 하나 쌓아둔 자산은 일본에 훨씬 못 미친다. 일본은 세계 제일의 대외자산 보유국이다. 한·일 간 소득격차 축소 및 일본 사회의 폐쇄성을 목격하며 ‘일본은 더 이상 참고할 여지가 없는 나라’로 치부하는 것은 한국으로서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일본의 우익성향 정치 행태나 식민지배 역사를 떠올리면 감정이 앞서기 십상이나, 감정적인 대일 전략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은 경쟁과 협조를 내건

‘협조적 자본주의’ 체제를 취하면서 소부장 분야의 기술 축적으로 제조업에서 강점을 발휘해 왔다. 한국이 소부장 산업의 국산화를 이루어간다 하더라도 일본의 축적 기술을 이용하는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성숙한 대처로 사회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가는 유력한 방법의 하나는, 대일 파이프 구축을 통해 일본의 축적(지식·자본·기술)을 활용하여 한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 구사다. 사냥을 잘 하는 때는 발톱을 숨긴다.



국중호

요코하마시립대 교수/게이오대 특별초빙 교수

“

〈관정일본리뷰〉는 일본이슈 및 한일현안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발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서울대일본연구소가 기획하고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

※ 필진의 글은 일본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